



중국 청사 편수(淸史編修)의 최근 상황

정혜중_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 목차 |

- 청사 집필 20년 여정
- 중국역사연구원과 『청대국가통일사』
- 출렁이는 청대사 연구

중국 청사 편수(淸史編修)의 최근 상황

정혜중_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중국 학계에서 2002년 3월에 착수한 청사 편수 프로젝트의 결과 및 출판물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간 한국 학계와 언론에서도 한국사와 관련 있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었다. 특히 청사 발간을 목표로 하였던 2012년(신해혁명 100주년) 전후로 관련 글도 간간이 보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2023년 11월 3일, 예일대학의 법제사, 비교사 전공 학자 장타이수(張泰蘇)가 X(구 twitter)에 ‘오늘의 학술 뉴스’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현재 런민대학교 청사 공정은 프로젝트 초안이 ‘인민의 관점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위 당국의 심사평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청사 공정이 ‘미국의 신청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사 집필자 대부분이 계속하여 신청사관을 맹렬히 공격해 온 것은 생각하면, 정부 주장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청사 공정에 거의 20억 위안(3,60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정치적 판단 오류로 모두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학술 검열 현황이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¹

그가 올린 글이 신문으로 옮겨지며, 중국어권 언론이 한동안 떠들썩했다.² 이런 소문의 진위는 확실하지 않으나, 시진핑 집권 2기 역사학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청사 공정에 관한 개괄을 통해 청사 편수 과정을 살펴보고, 시진핑 집권기에 불고 있

1 <https://twitter.com/zhangtaisu/status/1720433121428971934?s=46>

2 「未通過政審《淸史》觸礁」, 『星島日報』, 2023.11.07; 「淸史編纂紛擾持續 傳未通過中國政審」, 『臺灣中央通信社』, 2023.11.09. 등.

는 중국 역사학계 및 청대사 연구 이슈를 간단히 정리하여 중국 당국의 청사 공정에 관한 입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청사 집필 20년 여정

주지하듯이 청사 편수에 관한 언급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21세기 초두인 2000년 말, 런민대학(人民大学) 청사연구소 다이이(戴逸) 교수가 ‘청사 재편집(清史再編纂)’에 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³ 그리고 2001년 3월 양회,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차 회의 석상에서 인민회의대표였던 런민대학 리원하이(李文海, 1932-1913) 교수와 정치협상회의 대표였던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왕샤오추(王曉秋, 1942-) 교수는 청사 편찬사업 의안을 국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회의에서 리원하이 교수는 청사 편찬에 중요한 문화적, 현실적 의의가 있으며, 현재 중국 역사 연구에서 청사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청나라가 멸망한 지 이미 90년이 지났고, 대형 청사를 편찬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정부, 사회, 학계가 모두 이 거대한 문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작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또 왕샤오추 교수도 신해혁명을 기념하는 동시에 청대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정리해야 하며, 청나라가 멸망한 지 90년이 지난 지금 국가 조직이 청사 편찬을 지도할 시기가 이미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은 G2로 성장하던 당시 중국 정치가와 연구자에게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에 들어서 국가도 구체적인 일정에 맞춰 편찬 작업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2002년 3월 29일에는 청사 편수비공작영도소조(纂修備工作領導小組)가 문화부에 설치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는 편찬 작업이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비공작영도소조의 구체적인 지도하에 이 작업에 참여한 각계 인사는 신속하게 전반기 준비 작업에 관한 세밀한 준비를 마쳤다. 2002년 8월,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주룽지(朱鎔基), 리란칭(李嵐清)은 문화부가 제출한 청사 편찬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계획의 시작을 결정했다. 11월, 당 중앙과 국무원 14개 부서와 위원회⁴가 공동으로 국가청사편수영도소조(國家清史編修領導小組)를 구성하였다. 12월 12일에는 국가청사편찬위원회가 정식으로 성립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청사 편수에 오랫동안 관여하였던 런민대학 다이이(戴逸) 교수에게 주임 직책이 맡겨졌다.

3 다이이 교수는 2000년 12월에 잡지 『라오왕(瞭望)』 기자와 인터뷰에서 청사 편수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 『瞭望』 2001년 第8期

4 中共中央宣传部、中央文献研究室、国家档案局、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教育部、财政部、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文化部、新闻出版总署、中国社会科学院、国家文物局、中国第一历史档案馆、中国人民大学、国家图书馆、故宫博物院

한편 2003년 1월 28일, 리란칭(李嵐淸) 부총리가 중난하이(中南海) 즈광거(紫光閣)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현대 중국의 학문 수준을 반영한 청사 결작을 편찬하고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유산으로 만들자.”라고 제안하면서, 청사 편찬 및 개정에 관한 5개 항의 지침에 합의하였다.⁵ 이로써 청사 편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청사편찬위원회 주임 다이이 교수

마다정(馬大正)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청사 편수 과정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2003년~2004년) 원칙적인 큰 틀을 정하였다. 다이이 교수가 7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청사 편수와 관련한 일반 계획을 연구하고, 청대사 관련 책을 분류하며 청사 연구 현황에 대한 검토(① 중국 최신 연구 및 연구자 상황, ② 지난 10년간 청사 연구에 영향을 미친 외국 연구 상황, ③ 20세기 중국 학자의 청사 연구 목록의 수집과 대조, 색인 정리, ④ 청사 연구자풀 조사 구축, ⑤ 역사상 진행된 수찬(修撰) 경험과 교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단계(2004년 초~2005년) 청사 집필의 기본 계획이 완료되었다. 편찬위원회가 11차례 회의를 통해 통기(通紀) 11항, 전지(典志) 65항, 전기(傳記) 25항, 사표(史表) 23항을 포함한 주체공정 147항, 그 외 도록 등 특별항목 23개 등 청사의 기본 항목작업을 마치고, 이후 2007년 12월까지 청사 편찬 항목을 계속 늘려 총 284항목 중에서 주체류 항목이 173개, 기초 및 보조류 항목이 111개로 증가하였다.

3단계(2005년 하반기~2011년) 약 6년 반 만에 5가지 주요 범주에서 173개 항목의 첫 번째 초안 작성을 완료했다. 완성된 초안은 인용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했는데, 대략 항목당 20만~30만 자에 이르렀다. 인용 자료가 본문의 몇 배가 되는 항목도 있었다.

5 馬大正, 「修一部信史和良史 —2019年10月在常熟市图书馆“庶民讲座”上讲演稿(2020年第31、32期)», 中華文史網 홈페이지 <http://www.qinghistory.cn/qsck/431150.shtml>

4단계(2008년 12월~2018년 9월) 완성된 청사 초고를 3차에 걸쳐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이었다.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는 천 명이 넘었고, 집필자의 글쓰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 게다가 1차 검토 단계인 2014년에 누락한 사건 혹은 인물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에 2014년 새로 2차 검토 단계를 진행하면서 내용 확인 작업을 통해 중복과 모순 그리고 누락한 내용으로 구분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3차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마치고, 2018년 9월에 기본적인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5단계 검토 및 출판으로, 정리 단계이다. 완성된 원고는 바로 중앙 정부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다. 2018년 10월 24일, 검토 작업을 위한 영도소조(領導小組)가 구성되었다. 마다정 또한 선도위원 설립 회의에 참석했음을 밝히며, '각 항목의 전문가가 스스로 인식한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혹은 '독자 의견에 따라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중앙 정부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2019년 1월 설립)으로 하여금 제출된 원고 초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중국역사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3번의 검토와 3번의 교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⁶

위 5단계에서 마다정은 '독자 의견에 따라 수정해 나간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과연 청사의 초고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의문이다. 정치 지도자와 공산당의 사상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영도소조의 기본 방향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2023년 6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106권, 3,200만 단어에 달하는 청사 원고의 검토가 거의 2년 만에 완료되었다는 보도를 전하였다.

하지만 공식 심사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고,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중국 정부의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학자 장타이수가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로 미루어 중국 당국에 청사 편수에

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간 시진핑 주석이 청사 편수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간간히 나왔는데, 그 우려가 검열을 통해 청사 편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책의 출판 여부보다도 시진핑 정부의 정치 및 정책의 출렁임이 지식인의 사유와



국가청사편찬위원회 도서

6 「清史編纂紛擾持續 傳未通過中國政審」, 『臺灣中央通信社』, 2023.11.09

사상은 물론, 역사 연구를 비롯한 학술 연구 영역의 자율성에까지 확대된다는 사실 자체가 걱정이다. 나아가 2019년에 설립된 중국역사연구원에서 1965년에 설립된 런민대학 청사연구소가 주도하여 20년 가까이 작업한 청사 편수사업을 심사하고 문제점까지 지적하였다니, 심사기관인 중국역사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이 궁금해진다.

2. 중국역사연구원과 『청대국가통일사』

시진핑 집권 2기를 위한 정계에서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역사학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중국역사연구원의 설립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2019년 9월, 중앙 정부로부터 청사 초안 검토 작업을 넘겨받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은 관련 전문가를 모아 검토를 진행하였다. 11월 초에 장타이수가 언급한 정치적 오류의 주체 기관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월 3일,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중국역사연구원은 역사 연구를 총괄하고,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계획 실행한다.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중국 특색을 지닌 역사학의 학문 체계 및 담론 체계의 건설과 역사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며,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인식하는 역사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부에 알리고 국민을 교육하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원 당시 시진핑 주석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역사 연구가 사회과학의 기초이고, 역사 유물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데, 지금도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⁷ 중국역사연구원 개원 직후인 1월 14일 런민일보는 「청사 연구의 담론 권력을 견고하게 장악하자(牢牢把握清史研究话语权)」라는 글에서 “청나라 역사는 오랫동안 중국인에게 다양한 물질, 정신 형태로 기억되어 왔으며, 그중 일부는 중국 민족의 혈통에 통합되어 현대 중국 역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민족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청의 통치자들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명나라 시스템을 흡수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국가 통일을 달성하고 사회 질서를 재건했다.”라며 명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극소수의 학자들은 청대사 분야에서 ‘중국을 넘어선 제국 모델’과 ‘내륙 아시아’라는 핵심 개념의 신청사에 참

7 http://hrczh.cass.cn/ywdt_135233/yw/201907/t20190726_5606203.shtml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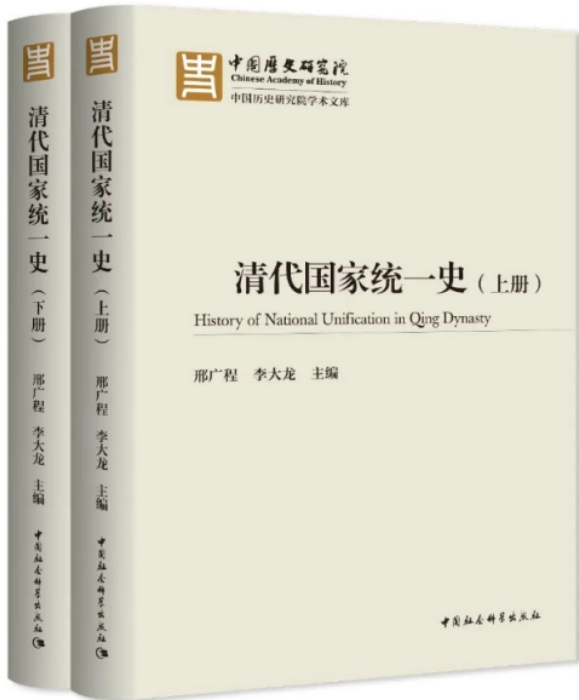
여하기도 했다.”라며 미국 학계의 영향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청나라 역사에 관한 연구 성과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청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비중 있는 연구 성과가 당과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중국 특색, 중국 격조, 중국 기풍을 가진 청사 연구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과제이다.”⁸라고 학계의 연구 동향을 비판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2023년 11월 장타이수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는 이미 2019년 중국역사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청사의 심사를 시작하였던 시기부터 결정된 정부의 관점이었다.

중국역사연구원이 청사에 대해 이러한 관점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고민하였던 부분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걸맞은 청사 연구를 하자는 논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2023년 6월에 발행된 『청대국가통일사(清代國家統一史)』로 이어졌다.

같은 달 12일 관영 환구망에서는 「어떻게 과거에 미래를 갖게 하는가, 중국역사연구원에서 답을 찾다」라는 보도에서⁹ 얼마 전 중국역사연구원에서 국가 주요프로젝트로 『청대국가통일사』를 발표하였는

8 「牢牢把握清史研究话语权」, 『人民日報』, 2019.01.14. <http://opinion.people.com.cn/BIG5/n1/2019/0114/c1003-30524940.html>

9 「如何让“过去”拥有“未来”来中国历史研究院寻找答案」, 『环球网』, 2023.06.12 <https://baijiahao.baidu.com/s?id=1768455228548271313&wfr=spider&for=pc>



『청대국가통일사(清代國家統一史)』

데, 중국역사연구원 설립 후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이며 국가사회과학기금 프로젝트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총 두 권, 110만 자로 구성된 이 책은 청대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기반으로 시간, 공간, 시스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청의 ‘대일통’ 사상을 계승하고, 국가 통일을 실현하며 통일 과정을 공고히 유지하고, 풍부한 사료로 중국이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 변경 지역을 통치한 사실을 실증했다고 주장하였다. 책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집필자인 싱광청(邢廣程)은 중국변강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나 역사학자라기보다는 국제관계연구자로 볼 수 있다. 공저자 리다룡(李大龍) 또한 한대(漢代) 전공이기에, 왜 이 두 인물이 청대 역사에 관여하였는지 의문이다.

책 소개에는 이 책이 통일의 관점에서 청조가 변방을 다스린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논하고, 청조의 통일 전모를 보여 주고, 전략적 변방의 과정을 정리하고, 그 득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또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은 중국 대륙에서 변영한 많은 민족에 의해 세워졌는데, 청대는 다민족 국가 중국의 통일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중국의 강역이 정형화된 시기이며, 청대 통일 다민족 국가 형성과 발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학술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같은 달 2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역사연구원을 둘러본 후 문화전승발전좌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화 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연설하면서 이를 위해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혁신하되 바른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¹⁰했다고 전한다.

이에 변경 문제 연구자인 싱광청은 “시진핑 총서기의 중국역사연구원 시찰은 많은 사학자에게 큰 고무와 채찍이다. 변경 지역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큰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는 국가 통일의 전략적 고도를 유지하고 현장 조사 및 고고학적 발굴을 강화하며, 변경 민족 지역의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또 중국 변경학 학과 체계, 학술 체계 및 담론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경,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은 중화 민족 공동체 의식을

10 「中 국가판본관·역사연구원 시찰한 시진핑, “문화적 자신감 확고히 해야”, 『동아일보』, 2023년 6월 5일

확고히 하는 견고한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 사명을 효과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¹¹

3. 출렁이는 청대사 연구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중국사회과학원 심사에서 문제가 된 점은 중국의 청사 공정 원고가 외국의 신청사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의 중국 연구, 특히 ‘신청사(New Qing History)’라 불리는 연구에 광범위한 비판과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1세기를 전후하여 미국의 신청사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청대사 연구와 더불어 만주어 학습 붐도 일었고, 그 결과 청대사 연구에는 만주 자료 활용이 필수가 되었다. 이런 연구 동향이 국내 학계에 다수 소개된 바 있다.

중국에서도 미국의 신청사 연구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청나라가 소수 민족이 세운 ‘비한족 정복 왕조’임을 강조하고, 중국 역사에서 청 왕조를 한족이 세운 나라와 구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만주의 민족적 정체성과 만주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며, 만주족이 한화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셋째, 민족, 국경 및 새로운 이론적 틀의 관점에서 청나라 역사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청대사 연구에 만주, 몽골, 위구르 및 기타 문헌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한 미국의 신청사 연구는 최근 서양 학술 연구의 중심 추세지만 결코 서양 학계 연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 관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학자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학과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단일화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는 미국의 신청사 연구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¹²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펴는 연구자 중 청사 공정에 참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신청사에 비판을 가한 연구자들은 변강사연구소 연구원들이고, 특히 심사에 참여하였던 마다정도 지속하여 신청사를 경계해 왔던 인물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청사 편수가 신청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심사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사 편수가 정치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이 설립되면

11 『清代国家统一史』发布, <https://baijiahao.baidu.com/s?id=1768009097263117194&wfr=spider&for=pc>

12 刘姗姗, 『“新清史”流派的形成及其主要观点』, 『(2020年 第26、27期) 中华文史网』, <http://www.historychina.net/qsck/431146.shtml>

서 정부와 관영 언론에 의해 강조된 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생을 바쳐 청사를 연구하고, 청사 편찬을 책임진 국가청사편찬위원회 주임 다이이 교수는 2024년 1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주도한 21세기의 청사 편찬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그를 비롯한 청대사 전문가들이 20년간 정리한 자료를 증시하기보다 중국역사연구원을 만들어 역사의 이데올로기화를 기도하는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혁신할지, 혹은 바른 것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정혜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인문사회연구과에서 중국근대경제사를 전공하고 문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으며, 청대 한중관계사 및 청대 의료를 연구하고 있다. 논문 「아편전쟁 전후 청조의 아편중독에 대한 이해」(『중국사연구』 146호), 「아편전쟁 이전 罌粟과 鴉片의 이해 — 약재에서 금지품으로 —」(『이화사학연구』 64), 편저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중국근현대사강의』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3:1절에 생각하는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 합사 철회 소송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톨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중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
- 제56호**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제57호** 19세기 동아시아 국경 획정과 「태정관지령」
- 제58호** 몽골인의 눈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
- 제59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 제60호**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
- 제61호** 거란국[遼]의 국가 성격과 외교 전략

제62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